

이 자료는 '15.1.19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8(일) 12:00 이후 보도가능

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 (투자활성화 대책 중)

◇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는 부족

*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공간 부족, 새로운 서비스업종 산단입지 곤란 등

⇒ 첨단·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 조성
(총 5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)

i) 창조경제 구현의 랜드마크로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(1.5조원)

ii) 첨단업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6개 추가 조성(3조원)

* 선정위치: 대전, 울산, 남양주, 경산, 순천, 제주

iii)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'도시재생모델' 마련 등 창의적 개발 방안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

iv) 지식산업센터 개편 및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입주 활성화를 통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입지여건 개선

v) 항공정비(MRO)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(0.5조원)

(1)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

□ (현황) 現 판교 테크노밸리(66만㎡)는 대표적인 IT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, 확장공간이 부족*하여 신규 입주수요에 대응이 어려움

* 경계가 확정된 파크형 단지로 기 분양완료('11.5월)되었고, 부지면적도 주요 선진국 클러스터에 비해 협소 (美 실리콘밸리 대비 0.02% 수준)

○ 유망 SW기업이 집중*되어 있으나, 기업 지원시설(창업지원공간, 컨벤션센터 등) 및 문화·편의시설 등은 부족

* 포스코, 한글과컴퓨터 등 IT(56%), NHN, NC, 넥슨, 카카오 등 CT(17%), 파스퇴르연구소, 차그룹, SK케미컬 BT(9%) 등 총 870여개 기업(6만명 근무)

□ (개선방안)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'판교 창조경제밸리'로 육성*

* 판교에 '창조경제밸리'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고, 타 지역으로 단계적 확산(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, '14.7.24일)

① 공간구상 :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복합공간 조성

○ (개발방식) 국가 정책과 연계*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

* 선도모델을 창출하여,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확산

-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계획(안) 마련('15.상) →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('16.상) → 분양('17.상)

○ (대상부지)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하여 부지면적 43만m² 규모(판교 테크노밸리의 2/3수준)로 조성*

* 단지 정형화를 위해 도공부지 북쪽의 일부 외교부 국유지(1.2만m²) 편입

- 판교 테크노밸리와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한 지역에 기업이 원하는 저렴한 용지를 공급(조성원가: 약 900만원/3.3m²)

- 투기수요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(경기도),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(성남시)으로 지정

○ (개발구상) 복합산업공간, 혁신교류공간 및 연구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경제의 랜드마크 조성

- (복합산업공간) IT,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*을 중심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산업집적 및 융복합 촉진

* 글로벌기업, ICT 등 판교내 유망기업과 시너지 창출(해외동반진출, M&A 등)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(벤처캐피탈, 보증기관 등) 등의 집적을 위한 공간 제공

- (혁신교류공간: I-Square)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호텔,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하고,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교류공간으로 활용

- 민간 공모방식*을 통해 기업 유치계획 및 개발계획이 우수한 개발사업자에 공급하고,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 업종을 결정하여 업종간 융복합 유도

* 창의적 사업제안 유도를 위해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원형지 형태로 공급 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, '15.10월)

I-Square 조감도	주요 기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호텔, 컨벤션 센터 및 오피스텔, 공원녹지, 문화공간 등을 융합 제공 ▪ 일부공간에는 기업지원허브 건물을 건립하여 창업기업 지원시설 등 유치

- (연구공간) 공공·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하여, 기존 판교내 기업·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

② 기업 지원체계 구축 :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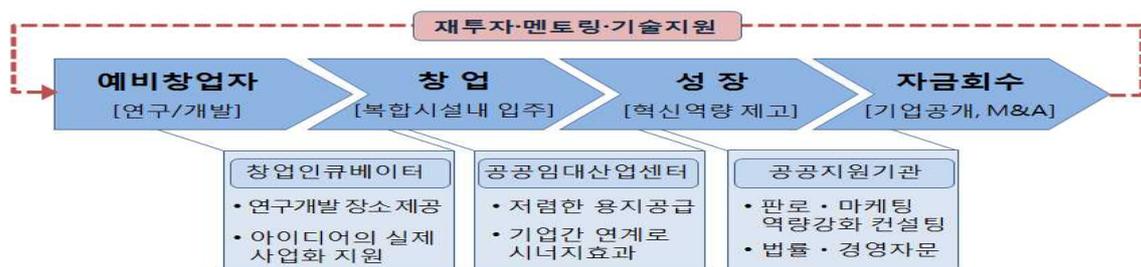
- (기업지원허브) 공공부문(LH 등)이 복합시설을 건설하여 기업 성장주기(연구·개발 → 창업 → 성장)에 따른 맞춤형 공간* 제공

* 저렴한 임대료(시세대비 70%)로 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공간 마련

- 복합시설 내에는 창조경제 관련 연구기관, 기술인증기관 및 서비스업체(금융·법률 등) 등도 입주하여 기업 혁신역량 제고

< 기업지원허브 공간 구상(안) >

- 저층: 창업카페(투자유치 및 정보 교환공간), 상업시설
- 중저층: 기업지원시설(정부지원시스템, 벤처 인증기관(신기술, 신제품), 법률·경영자문 시설 등), 문화복지시설(도서관, 어린이집 등) 및 대학원 분원 등
- 중고층: 창업 인큐베이터센터, 공공임대산업센터
- 고층: 주거시설(오피스텔, 단기 기숙사 및 SOHO기업 공간 등)



○ (정부지원시스템) 개발 초기단계부터 범정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,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

- 관계부처 TF를 구성(15.3월)하여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, 구체적 지원제도를 수요기업 입장에서 원스톱 안내 및 제공*

* 각 부처 지원센터를 '기업지원허브' 건물에 집중 유치하여 연계 운영

< 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상(안) >

- (미래부)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연구능력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, 기업혁신 역량 및 판로·마케팅 역량 제고
 - * 창조경제밸리센터(現판교 테크노밸리 위치, '15년 완공)에 구축예정인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실생활 테스트 환경(Living Lab) 구축
- (산업부) 산학융합지구, 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사업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전개
- (문화부) 코리아 콘텐츠랩,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등 문화산업 진흥기관 입주를 통해 창작공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
- (중기청)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지원

③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: 주거·문화 및 연구·교육기능 제공

○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시설(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)을 공급하고, 개방형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감각적인 정주공간 실현

○ 관계부처 협업으로 교육·연구 및 문화·복지시설 등을 유치하여 단지 내에서 생활-일-연구·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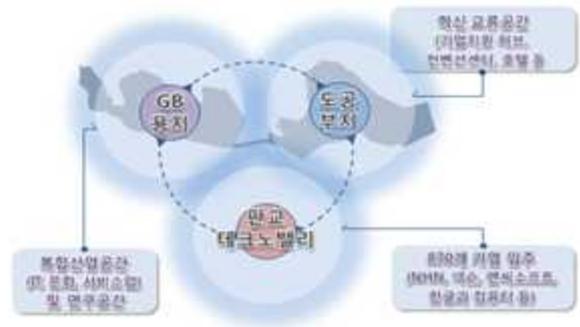
< 정주환경 조성 구상(안) >

- (교육시설) 대학원(분원)을 유치하여 Open Lab*을 설치하고, 창업 전문학교 등을 유치하여 공동연구·인력양성 등 입주기업 구심 역할 부여
 - * (예시) 美 실리콘밸리 창업전문학교 드레이퍼대학, 스탠포드 D-School 등과 같이 SW·BT·IT 등 분야별 초기기업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제공
- (문화시설) ICT와 콘텐츠 기술을 융합한 '창조문화콤플렉스'를 건립하고, 스타트업과 문화·예술이 어우러진 국제행사* 및 글로벌 창업오디션 등 개최
 - * (예시) 음악 페스티벌과 영화·게임 등 미디어산업 컨퍼런스 등을 병행 개최하여 투자유치 및 기술시연 기회제공
- (복지시설) 산단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, 자녀와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하여 육아환경 개선

단지 조감도



개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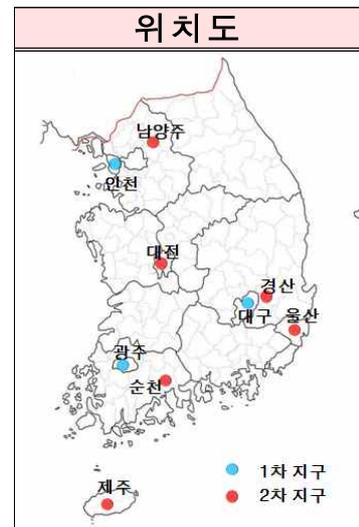
➔ 관교 벨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고, 우수한 경관 및 건축계획으로 첨단산업과 문화·여가생활이 공존하는 복합공간 조성

- (기대효과) 부지조성 및 건축에 약 1.5조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,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
 - 창조경제벨리 조성완료시, 관교는 1,500여개 첨단기업이 집적되고,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 예상

(2)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개발

- (현황) 첨단기업은 인력·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나, 도시첨단산단 면적*은 전체 산업단지의 0.2%에 불과
 - * 현재 12개(총면적 2.4km²) 지정 완료하여 4개소 운영중(8개 조성중)
 - 도시첨단산단 확대를 위해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('13.9월)하고, '14.3월 1차지구 3개 대상지역*을 선정
 - * 인천(남동공단 연계), 대구(울하신도시 연계), 광주(광주 과기원 연계)
- (개선방안) 도시첨단산단 2차지구 6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,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
 - (대상지역) 대전, 울산, 제주, 남양주, 경산, 순천
 - 2차지구 개발계획(안) 마련('15.상) → 산업단지 지정('16.상) → 토지 보상('17년) → 착공('18.상) → 분양('18.하)

지역	면적 (㎡)	개발 구상
대전 유성	105,550	▪ 바이오·ICT 등 첨단산업 중심 산단
울산 중구	300,000	▪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및 R&D, 지원서비스
제주	163,535	▪ 도심에 위치한 IT·문화중심 첨단산단
경기 남양주	283,814	▪ 스마트그리드, 신재생에너지 중심 첨단산단
경북 경산	295,996	▪ 첨단산업과 R&D 중심 클러스터
전남 순천	181,000	▪ 광양만권 R&D 및 기업서비스 거점



* 사업면적은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(지역특성 반영) 지구별 산업기반,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,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

○ (산업도시 조성) 첨단산업(첨단자동차, 그린에너지, 문화산업 등)과 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여 우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도시로 육성

- 복합 공간계획(업무+주거+상업)을 마련하고, 산단 관련 사업*의 패키지 지원으로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개발

* 산단형 행복주택, 직장 어린이집, 근로자 복지센터, 산단 캠퍼스, 산학융합지구 등

○ (창업지원)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,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지원

- 아이디어가 우수한 창업기업,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지내 일정 용지를 구획하여 우선 공급*

* (예시) 대전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사업화 전용단지 조성 계획중

○ (이전기업 지원)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하여,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·서비스기업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*

* (예시) 제주시는 이전기업 대상 용지 우선 공급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중

□ (기대효과) 약 3조원의 투자효과 예상 (1개소당 약 0.5조원)

○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, 대학·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,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조경제 공간 제공

<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(안) >

① **대전 : 창조경제사업화 중심단지 (CBT : Creative Business Town)**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105,550㎡ (GB)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카이스트,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단		

□ (개발구상) 소프트웨어, 반도체 등 첨단업체를 유치하고,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스타트업, 벤처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제공*

* SK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및 대전의 기술력 있는 주요 중소·벤처기업들과 연계한 사업화 공간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혁신역량 확충

- 인접한 카이스트,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·개발성과가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

② **울산 : 그린카 네트워크 첨단단지 (Green Car Network Complex)**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300,000㎡ (GB)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중심단지		

□ (개발구상) 현대자동차 및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(자동차생산벨트)와 연계,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관련 첨단업종 집중유치*

* 그린카 및 스마트카 관련 연구업체를 집중 유치하여, 인근 오토밸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

-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하고,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활용한 산업도시로 조성

<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(안) >

③ 제주 : 감성 오름 문화단지 (Jeju Culture Island)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163,535m ²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게임산업 및 지식산업 집적단지		

□ (개발구상) (주)네오플 등 제주 이전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·소프트웨어 개발업, 정보산업 등 IT기업 집중유치*

* 사업지구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,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

○ 道에서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,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연구·제조 기능, 관련기업 육성 및 전문교육 등 혁신기능 집적*

* (주)다음카카오, (주)이스트소프트 등 총 117개 기업이 입주한 인근 첨단과학기술단지와의 연계하고, 관내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제주의 혁신거점으로 육성

④ 남양주 : 그린에너지 중심 첨단단지 (Green Smart Valley)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283,814m ² (GB)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신재생 에너지,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단지		

□ (개발구상) 태양광발전, 연료전지 발전사업 위주의 업종계획으로 에너지 중심단지로 육성하고, 유진 에너지팜 등 관련 앵커기업 유치*

* 서강대캠퍼스('18년 개교예정) 및 경북대(남양주시 소재)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생들의 인턴십·실무경험을 제공하고 현장중심 기술개발 유도

○ 市에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단지거점*으로 활용하고, 인근에 축구장, 공원 등을 조성하여 문화, 여가 공간 제공

*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, 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컨트롤 센터 설치

<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(안) >

⑤ **경산 : 산학연 클러스터 파크 (GCP : Gyeongsan Cluster Park)**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295,996㎡ (GB)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첨단산업과 R&D가 융합된 창조적 지식·산업 클러스터 조성		

- (개발구상) IT융합, LED융합 등 첨단업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고, 경북 테크노파크, 영남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거점으로 활용*

* 산업 ZONE, R&D ZONE 등 기능별로 계획, 연구와 기업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조성

- **산단내 행복주택** 단지를 조성하여 **청년층 및 사회초년생** 등의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

* 단지내 중심공원을 조성하고 타 기능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체계를 구상하여, 일과 휴식이 조화될 수 있는 근로자 친화형 단지로 조성

⑥ **순천 : 에코 R&D 캠퍼스 (Eco R&D Campus)**

□ (사업개요 및 개념도)

개발규모	181,000㎡	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개발구상		
우수한 정주환경을 활용한 연구·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		

- (개발구상) R&D, 첨단업종 위주로 업종을 계획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집중 육성

- **공공·민간 연구소**를 집중 배치*, 지역 혁신기능을 강화하고, **컨벤션 센터** 등 지원기능과 접목시켜 **광양만권(광양, 여수)의 생산기능 지원**

* 의약소재연구센터, 전남테크노파크 및 지본 코스메틱·파루 등 민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, 선박엔진 성능시험 및 인증 등 조선산업 관련 연구소 및 장비 구축

(3)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

- (현황)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유향화된 구도심, 폐항만 등은 높은 지가*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이 부진

* 평당 보상가: (인천 루원지구-구도심) 660만원 vs (동탄-신도심) 299만원

- 사업초기에는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일시에 투입*되는 반면, 수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민간투자자의 리스크가 높음

*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매입비가 사업비 총액의 30~50%를 차지

-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진행중인 구도심은 낮은 경제활력 등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- (개선방안)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, 입지규제최소구역* 지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

* 용도지역·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, 용적률, 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(국토계획법 개정 완료, '14.12월)

- (대상부지) 도심내의 공공청사 이전부지, 폐항만, 철도시설,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향화·노후화된 국공유지

- (개발방식)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, 공공기관(캠코, LH 등)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 추진

-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

- 콘텐츠·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도 거점으로 활용

- (입지규제 완화)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*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구상 지원

* '17년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정, '18년부터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

- 건폐율, 용적률 등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등 타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

- (금융지원)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·융자 (주택도시기금, 정책금융공사 등) 등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
- (추진계획)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사업지역 선정하여 착수('16.3월, 국토부)

< 도시재생모델상 역할분담(안) >

구분	공공부문	민간투자자
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지의 현물출자 또는 위탁 · 기반시설 재정지원, 정책금융 투·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재원조달, 사업시행 참여 ·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·테넌트 유치
수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·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· 토지소유권 유지, 자산가치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 · 초기 사업 비용·위험 감소 · 공공참여로 인허가 등 협조

<개발예시: ○○ 청사 종전부지 개발(안)>

- (대상부지) '05년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부지활용·개발 필요
- (투자지체 요인) 토지건물가액 800억원, 개발사업비 2,500억원 등 사업비가 과다하여 민간 매각을 통한 개발에 어려움
- (투자유치 방안) 부지 매각 대신 공공기관(LH, 캠프 등)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절감
 - 토지는 지자체가 계속 소유하고, 개발 후 일부(예시: 30%)는 공공 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(예시: 입주기업 지원센터 등)

< 사업 및 재원조달 구조 >



□ (기대효과)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고,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관련 산업 유치

(4) 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

□ (현황) 서비스업은 좁은 입지에도 입주가능하나, 저렴한 지가와 소비자 접근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 확보에 애로

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도심 인근 건물에 첨단지식산업의 수직적 집적이 가능하나, 서비스업 입지에는 한계

-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며, 일부 서비스업은 지원시설 업종*으로 분류하고 입주비율도 일정범위내로 제한**

* 금융, 보험, 교육, 의료, 무역, 판매업,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상점 등

** 지역별 지원시설업종 제한(건축연면적 기준)

(산단내) 20%이하 (산단外 수도권) 30%이하 (산단外 비수도권) 50%이하

< 지식산업센터 개요 >

- (정의)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(산집법)
- (현황) '14.4월 기준 전국 632개소 운영중 (수도권 505개소, 비수도권 127개소)
- (입지)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에도 입지 가능
- (조세혜택)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 한해 취득세 50%, 재산세 37.5% 경감

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 공급하는 방식임에 따라,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 괴리

-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한 구조

*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, R&D 센터, 창업지원기관 등

③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*만 입주 가능

* 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정보통신산업, 문화산업 등

- 그간 입주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, 콜센터,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됨

□ (개선방안) R&D센터, IT·컨텐츠·SW 등 유망서비스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

① 지식산업센터 개편을 통한 도심내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

○ 콜센터, 광고대행업 등*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,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 폐지(산집법 시행령 개정, '15.10월, 산업부)

* 제품 A/S,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허용

○ 국고보조사업(지역특별회계)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

* 대상부지는 GB 해제지역, 공공청사·공공기관 이전부지, 기타 국·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,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방안 검토

○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*하여 분양가 인하 유도(산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, '15.10월, 국토부)

* (예시) (준공업지역) OO시 조례 350% → 법적 상한(400%) 적용

②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수요발굴 및 지정확대

○ 기존 건물의 일부(사무실)를 서비스형 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 확대*('15.12월, 산업부)

* 예산에 신규내역 사업으로 “임대료 지원”을 신설

③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('15.10월, 국토부)

○ 지자체·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서비스업 입주 지원 방안 마련

-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종 확대, 산업시설용지외 “서비스업 전용용지*” 도입 등을 검토

*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검토

⇒ 국토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('15.6월)

□ (기대효과) 도심지 내에 R&D센터, IT·컨텐츠·SW 등 서비스업 입지 공급 확대

(5) 항공정비(MRO*)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

* 정비(Maintenance), 수리(Repair), 분해조립(Overhaul) 포괄

□ (현황) 국내 항공정비 수요는 연 2.5조원에 달하며 매년 4%씩 성장중이나, 정비시설 및 기술부족으로 해외의존도 심화

* 연간 정비수요중 민간은 51%(年 7.5천억원), 군 60%(年 6천억원)을 해외 의존

○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·부품정비의 경우 기술력이 부족하여 전체의 62%를 해외에 의존

○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육외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안전상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

○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자체 중심으로 전문 MRO 합작법인 설립 및 신규 MRO 단지 조성을 검토중이나,

-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비시설 구축 등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, 안정적 수요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

□ (개선방안)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 설립 및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입지 등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

○ (입지지원)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부지, 시설 등 지원

-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부지 저가 지원 및 지방세 감면(지자체)

-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(한국공항공사)

*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원

-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하여 수요확보 지원(국방부, 방사청)
- (기술력 강화 지원)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정비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
 -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(50%) 규제 완화 (항공법 개정, '15.12월, 국토부)
 - * 현행 항공법(제6조)은 외국기업의 관련기업 지분율을 50% 미만으로 제한
 - K-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*을 이용하여, 해외 엔진·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·기술 이전 협의('15.2월부터, 국방부·방사청)
 - * 절충교역(offset trading) :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
 - 기초연구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(고교·대학) 지원 사업 지속 추진('14~'18년, 연 12.7억원)

□ (기대효과) 약 0.5조원의 신규투자 창출

- 제고된 항공정비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정비물량까지 확보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